

2017. 9.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총 평	1
II. 주요 논의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5인)	2
③ 지정자토론(4인)	5
④ 청중토론(8인)	6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9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9

-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서북지역, 특히 대산지역의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과 걱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17. 9. 14.(목), 14:00~16:00 / 서산시문화회관 소강당
- 참석: 10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 주제: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방안 모색

I 총 평

- 대산지역의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충남 서북지역, 특히 대산지역의 대기환경 오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대산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및 현황파악과 사회적 인식개선,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 요구
 - 지역주민~주민협의체~충청남도~서산시~중앙정부(환경부)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남 서북지역의 대기환경오염 실태 및 환경오염 통계의 정확한 측정 및 관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협력기반 구축과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II 주요 논의 내용(요약)

1 주제발표

<김동영(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현황과 변화 특성, 미세먼지의 지역간 영향 및 미세먼지의 지역별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 현행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관리 체계로는 최상위에 『환경정책기본법』, 전국 단위의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수도권 일부지역을 관리하는 『수도권 대기법』으로 구분
 - 첫째,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 환경기준 설정하고, 지역별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
 - 둘째,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배출시설관리체계 구성 및 생활환경상 배출원 관리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와 연료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관리,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요건으로는 환경기준 초과 또는 환경기준의 80%이상 지역과 인접 영향지역을 포함하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지역의 시·도지사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 지정 2년 이내에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단계별 대기질 개선목표, 목표배출량 또는 삭감량 제시)
 - 목표기간 내 실천계획 달성을 위한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 개선 목표 및 조건 달성 후 유지 계획서 첨부 제출시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해제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은 부산권, 대구권, 광양만권이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기질 개선 목표 수립
 - 대기질 저감 대책으로 대기환경관리체계, 자동차관리대책, 교통수요관리 대책, 기타 이동 오염원 관리대책, 배출시설 관리대책, VOCs 관리강화,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등을 수립

- 대기환경에 관련한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은 첫째, 국회차원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
 - 환경부는 『수도권대기법』의 개편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에 9월말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충남의 대기환경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 제시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관리 및 수도권 관리지역과의 연계 추진
 - 수도권에 상응하는 조직과 예산확보 및 추진체계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
 - 정책주체의 역할과 함께 주체간 기능과 역할의 효율적 분담
 - 지자체의 역량강화와 평가
 - 성과주의 운영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과의 연계
 - 현장관리 위주 업무는 중앙 ⇨ 시도 ⇨ 시군으로의 단계적 이양
 -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주체의 일원화 및 오염 매체별 통합관리로의 전환
 - 지자체의 환경관리 능력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강조
 - 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교차 점검제도의 도입 검토

② 지정토론 (5인)

① 안재수 (충청남도 환경보전팀장)

- 충청남도의 대기질 개선 계획의 2025년의 목표치와 8개분야, 29개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의 충청남도의 대기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과 반영 상황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현행 대기오염 규제지역 관리를 비교 검토
- 규제지역에 관련한 입법 동향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

- 충청남도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국정과제 58개 수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임기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 민간 계층 적극 보호, 오염 우심지역 특별 관리지역 지정 등의 국회의 입법 결과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검토
 - 도의 중기 대기질 개선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지역 지정 지속 건의 및 지정에 따른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

② 권경숙 사무국장(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서산지역의 대기환경 오염실태를 울산, 여수와 비교
 - 규제지역과 특별대책지역 구분에 대한 차이를 현행 법률을 토대로 비교 검토하여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
- 환경부와 충남도에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서산시를 대기환경 규제지역 또는 대기환경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
 -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서산태안 환경운동 연합과 충남도, 서산시와 공동으로 노력하겠음

③ 안효돈(대산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견)

- 대산지역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현재까지의 활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후의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정부 상대로 해결 방안 요구
 - 둘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우선 조치로 기업의 저감유도와 저감시설 설치 및 누락된 배출원의 색출 및 배출량 축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셋째, 대기환경오염 조사와 함께 건강 역학조사, 농수산물 피해조사, 해양, 토양, 교통, 주거 환경조사 등의 타 분야의 조사 시행
 - 넷째, 대산 전 지역 주민의 건강 영양 조사 실시

④ 가재군 보도국장(서산시대)

○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총량적 측면에서의 배출 규제
- 둘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의 철저한 관리
- 셋째, 오염피해 예방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 넷째, 오염물질 유발기업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을 통한 비용분담
- 다섯째, 충남도의 현 공업위주의 정책에서 친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충남도의 정책 전환
- 여섯째, 실효적 결과 도출을 위한 지역주민~서산시~기업~충남도과 함께 하는 환경협의체 구성

⑤ 김동혁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 대산지역의 환경오염 실태 파악과 보다 더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첫째,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둘째, 원격탐사를 이용한 대기 입체 분석 및 측정망 기능 제고
- 셋째, 대기분석 및 진단시스템을 통한 원인 분석과 기여도 파악
- 넷째, 대산지역의 대기환경영향 조사를 통한 오염실태파악
- 다섯째, 주민피해 최소화 및 지역 상생 방안 마련

③ 지정자토론

○ 수도권 규제지역에 충남도 포함시 예산 분배에 관련하여

[질의: 가재군 서산시대 보도국장]

⇒ 관련 예산 및 규제수준은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50%씩 분배

[답변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수도권 특별법의 효과

[질의: 안재수 충청남도 환경보전팀장]

⇒ 실효성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제도적 효과는 극명하며, 특히 대기 오염 측면에서는 제도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음

[답변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청중토론

○ 대산지역의 산단은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대기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에 국가산단으로 전환한다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이용규 양재소각장 반대위 위원장]

⇒ 대기관리는 법적으로 도와 시·군의 책임임. 다만 국가 지원여부는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협업과 공동노력에 따른 문제일 것 같다

[답변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산발전협의회와 코코스 발전소 반대 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환경 협의회가 존재하는데 지역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질의: 이용규 양재소각장 반대위 위원장]

⇒ 대산발전협의회 등 각 지역협의체와 지역환경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처함으로써 지역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해 가고 있음

[답변 :안효돈 대산읍발전협의회 부회장]

○ 대산지역내 서산읍 환경오염 측정 장비 도입과 측정 자료에 대한 공유 문제 제기

[질의: 안준탁(의사)]

⇒ 대산지역 환경데이터의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해 오고 있으며, 상세한 자료는 웹코리아에서 업로드 시켜 공유하고 있음

⇒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 상시적인 대기오염의 측정치를 측정 관리하고 있음

[답변 :안재수 충남 환경보전팀장]

⇒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를 서산에 설치하고 금년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대기질 환경영향 조사(2년)가 실시되고 그 자료는 공유토록 노력하겠음.

[답변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 시의회-행정-도의회 협업을 통한 대산지역 규제지역지정에 관련한 노력이 미흡하지 않는가

[질의: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 충남도는 1년전부터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시의회~도~지역협의체 등과 공동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본 토론회도 이러한 공동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답변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 서산시 환경담당자의 본 토론회 참석과 협의체 회의시 참석 여부와 측정소의 증설 문제 및 산단지역이나 발전소내의 자체 환경측정기 결과 공유 문제 제기

[질의: 일반주민]

⇒ 충남도는 서산시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도의 측정소 증설은 지속적으로 증설할 예정임 (내년 25개 증설)

⇒ 민간부문의 측정결과에 대한 공유는 18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답변 :안재수 충남도 환경보전팀장]

○ 서산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질의: 일반주민]

⇒ 본 토론 주제는 법·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환경 전반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에 책임 있는 답변은 불가능하며, 대기 환경에 관련한 이해문제는 시와 협의체와 함께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답변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 특별대책지역에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질의: 대산읍 주민]

⇒ 현재까지 입법동향과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을 살펴 본 결과 대기관리 권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특별 법안이 마련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정책의 전환에 대비하여 충청남도도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답변 :안재수 충청남도 환경보전팀장]

○ 서산시~충남도 대기환경에 관련하여 어떠한 연계를 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환경전반에 관련한 토론회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대리)질의: 권경숙 대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대기환경에 대한 대책과 방안 마련시 지자체와 면밀한 협의와 협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장은 지역주민-시민단체-공무원과의 협업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함. 또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 논의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답변 :안재수 충청남도 환경보전팀장]

○ 마무리 말씀으로 주제 발표하신 김동영 선임연구위원님의 정리말씀

[질의: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 지역 대기 오염 문제 중 본 토론회 주제와 맞지 않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면 반드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로 첫째, 중소기업장 관리문제가 있으며 둘째, 비관리 연소에 관한 문제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함

[답변: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충남지역 미세먼지와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관리의 필요성
 2. 우리나라 대기환경관리 체계와 정책 수단
 3. 대기환경관리 주요 정책 동향과 충남지역 대기환경관리강화 방안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대산지역 대기환경관리 실태와 현황 파악 및 관련 의견 수렴
- 대기환경 관리에 관련한 주요 정책 동향과 충남(대산지역)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논의

Ⅳ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후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충청남도의회(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참 고 자 료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참 고 1

토론회 사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28건)	비고
신문보도		6건	
1	충청투데이	대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토론회	
2	충청신문	“서산 대산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해야”	
3	충청매일	충남 서북부지역 대기환경 규제방안 머리 맞대	
4	충남일보	도의회, 대산단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여론수렴	
5	서울일보	“오염원 증가 ... 과학적 증명-정책 뒷받침 필요”	
6	충청일보	대산단지환경규제 지정위해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개최	
인터넷뉴스		22건	
7	연합뉴스	“서산 대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해야”... 충남도의회 토론회	
8	NEWSIS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방안 모색	
9	충청투데이	대산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토론회...맹정호 충남도의원 추진	
10	SNS타임즈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1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의정토론회	
12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3	백제뉴스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의정토론회	
14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5	세종방송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6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7	충남투데이	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8	충청뉴스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될까?	
19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14일 의정토론회 개최	
20	시민일보	충남도의회, ‘대산단지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의정토론회	
21	지케이뉴스	충남도의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22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23	서울일보	“오염원 증가... 과학적 증명-정책 뒷받침 필요”	
24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여론 수렴	
25	충남일보	도의회, 대산단지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여론수렴	
26	충청매일	충남 서북부지역 대기환경 규제방안 머리 맞대	
27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위한 의정토론회	
28	충청일보	대산단지 환경규제 지정 위해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개최	

대산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토론회

맹정호 충남도의원 추진

충남도의회는 14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주민 의견과 전문가 조언 등을 수렴했다. 맹정호 의원(서산1)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 규제에 대한 내실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남지역 미세먼지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를 주제로 발제했고, 안재수 도 환경보전팀장과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효돈 대산읍발전협의회 부회



장, 김동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공장 증설 등으로

대산지역 오염원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 총량 규제가 시급하다"며 "울산과 여수 등과 함께 3대 석유화학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에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한 곳도 없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서산 대산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해야”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개최... 맹정호 의원 “총량규제 시급하다”

충남도의회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론수렴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맹정호 의원(서산1)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 규제에 대한 내실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남지역 미세먼지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안재수 도 환경보전팀장과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효돈 대산읍발전협의회 부회장, 김동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공장 증설 등으로 대산지역 오염원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 총량 규제가 시급하다”며 “울산과 여수 등과 함께 3대 석유화학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과 천안 순천시·여수시 등은 환경부에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화학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한

곳도 없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국장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상시측정을 실시한 후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의장은 “지난 2010년부터 대산지역에 극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방안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산지역 대부분 토장이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위암률이 강한 오염물질이 바다 또는 대기 중으로 이동할

수 가능성이 크다. 대산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 차원의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오는 100여만여명 대기질을 낮추기 위한 공이 분야, 20개 과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 계획을 세웠다”며 “규제지역 지정은 위한 법률이 많이도 반영, 관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계획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대산지역 대기환경 개선은 위해서는 관내성원들 뿐만 환경관리와 대량이동 배출원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과학적 규명과 정책기반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 서북부지역 대기환경 규제 방안 머리 맞대

도의회, 대산단지 주변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의정보론회 열려 대규모 공장 증설 등 오염원 급증...과학적 증명·정책 뒷받침 필요

충남도의회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보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정호(서산) 의원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보론회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 규제를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남지역 미

세먼지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안재수 도 환경보전팀장과 권경숙 서산대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인효준 대신음발전협의회 부회장, 김동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병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공장 증설 등으로 대산지역 오염원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 총량 규제가 시급하다"며 "울산과 여수 등과 함께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늘과 전남 순천시·여수시

등은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화학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한 곳도 없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국장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상시측정을 실시한 후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된다"며 "미국 NASA에서도 서산대산지역의 환경오염이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에 이르렀다"고 보유했다.

안 부회장은 "2016년부터 대산지역에 극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산지역 대부분 토양이 오염됐고

이로 인해 휘발성이 강한 오염물질이 바다 또는

대기 중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산 전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등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2025년까지 대기 질을 낮추기 위한 8개 분야 중해 과제 등 대기질 개선 계획을 세웠다"며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이 발의된 만큼,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대산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관여설정을 통한 통합관리와 대형이동 배출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과학적 규명과 정책기반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승우기자

282 X 103 mm

도의회, 대산단지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여론수렴

맹정호 의원, 의정보론 갖고 미세먼지 등 내실있는 규제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보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맹정호 의원(서산 1·사진)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 규제에 대한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서는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남지역 미세먼지와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안재수 도 환경보전팀장과 권경숙 서산·대안 환경운동연합 사무

국장, 안효준 대신음발전협의회 부회장, 김동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병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공장 증설 등으로 대산지역 오염원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총량 규제가 시급하다"며 "울산과 여수 등과 함께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늘과 전남 순천시·여수시 등은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화학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한 곳도 없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국장은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상시 측정을 실시한 뒤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된다"며 "미국 NASA에서도 서산대산

지역의 환경오염이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2016년부터 대산지역에 극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산지역 대부분의 토양이 오염됐고 이로 인해 휘발성이 강한 오염물질이 바다 또는 대기 중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산 전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등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대산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관여설정을 통한 통합관리와 대형이동 배출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과학적 규명과 정책기반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영근기자 woomk22@dam.net

179 X 139 mm

“오염원 증가...과학적 증명-정책 뒷받침 필요”

충남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 지정 토론회

충남도의회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산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론수렴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맹정호 의원(서산1)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 규제에 대한 내실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남지역 미세먼지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안재수도 환경보전팀장과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효준 대산읍발전협의회 부회장, 김동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공장 증설 등으로 대산지역 오염원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 총량 규제가 시급하다”며 “울산과 여수 등과 함께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전남 순천시·여수시 등은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화학발전소가 밀집해 있

는 충남에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한 곳도 없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국장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상시측정을 실시한 후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된다”며 “미국 NASA에서도 서산대산지역의 환경오염이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인 부회장은 “2016년부터 대산지역에 극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산지역 대부분 토양이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휘발성이 강한 오염물질이 바다 또는 대기 중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산 전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등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대산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권역성정을 통한 통합관리와 대형이동 배출원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과학적 규명과 정책기반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경서 기자

115 X 143 mm

대산단지 환경규제 지정 위해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론수렴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맹정호 의원(서산1)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 규제에 대한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남지역 미세먼지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안재수도 환경보전팀장과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효준 대산읍발전협의회 부회장, 김동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공장 증설 등으로 대산지역 오염원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 규제가 시급하다”며 “울산과 여수 등과 함께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박보성기자

56 X 144 mm